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병술



첨단공단에 소재하는 A사는 2010년 3월 기능성 보온 옷병 하나를 2년에 걸쳐 일본에 480억원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수입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 A사가 생산하는 옷병은 광주의 3대 전자산업인 디지털 가전 제품으로 광산업과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장기적으로는 7조원 규모의 세계 옷병 시장에서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본촌공단에 소재하는 B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부직포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조폐공사에서 사용하는 지폐원료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B사는 현재 고기능 부직포 생산기술을 의료용 위생용품과 농업용 멀칭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아서' 경쟁력 키우자

우선 의료용 위생용품의 경우 경인지역과 과남지역에 소재하는 15개사로부터 약 60%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A사의 경우처럼 광주로 이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B사의 경우 약 2~3만 평을 확보하여 집적화할 경우 2014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하고, 약 1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물류비, 연구 생산비용 등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집적화 효과를 활용하여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광주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광주의 중소제조업체 수는 7천261개사이며, 이중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는 1천23개이다. 1차적으로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후 업종별, 분야별로 기술력을 갖추어 집적화가 가능한 기업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기업으로 집적화한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풀링시스템(Pooling System)을 구축, 구매와 판매에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풀링과 네트워킹은 개별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형 중소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광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2조4천580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이고, 7대 광역시중에서는 7위이다. 이와 함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액은 1천552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이고, 7대 광역시중 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른 시도민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하지 못하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광주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그 안에 내재되어 흐르는 나눔과 대동정신을 집적화와 풀링시스템을 통해 '모아서'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천안함 '46勇士' 희생 헛되지 않게해야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장례 절차가 확정됐다. 정부는 해군장으로 진행되는 장례기간(25~29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오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 천안함 '46용사(勇士)'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순국한 그들은 조국의 수호신(守護神)으로 국민 된 의무를 다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국민 된 의무를 다할 차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침몰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침몰 책임을 엄정히 가려야 한다. 사고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밝혀내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5일 '수중 비(非)접촉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부 폭발은 물론 좌초, 피로파괴 가능성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각종 폭발설을 완전히 일축한 것이다. 북한 연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북한 소행을 확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실제적 진실 규명을 위한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런 뒤에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국장병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농산물 가격·유가급등 민생 안정책 세워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6% 오른 113.7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일부 채소류는 최근 두 배 가까이 폭등해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다.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이 다음달까지 이어져 당분간 식탁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일회성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급등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들도 피해자다. 그럼에도 복잡한 유통단계로 중간 상인만 배리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 어느 정책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안정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승폭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일회성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급등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들도 피해자다. 그럼에도 복잡한 유통단계로 중간 상인만 배리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 어느 정책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안정의 첫 걸음이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6% 오른 113.7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기 고



임영률

기 고

공기업은 과거 민간역량이 부족했던 시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는 동안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왔다.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급이 보장됐고,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들 '신의 직장'

장·임직원의 연봉을 동결하여 임금 이 7대 광역시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지자체 내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각 공사공단 내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했다.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당연직 제외)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면직하도록 해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성과지향적 민간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공기업 뼈를 깎는 혁신을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했다. 또 공사·공단별 특성에 맞는 목표이행실적평가표를 개발해 공정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등 상벌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공기업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 대한 연봉조정, 인사조치, 조직의 폐지 또는 사업의 중지 등 시정권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산하 19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장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해증진을 통한 공기업 공동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1등 공기업,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아닌 고급서비스를 안겨줄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지속적인 실질을 이뤄나갈 것이다. 〈광주시 예산담당관〉

이라고 불렀던 배경은 아마도 사기업에 비해 혁신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은 곧 '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정권이 출범할 때면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번번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정치적 여건 등에 발목이 잡혀 계획이 축소되거나 아예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신의 직장'이 공기업은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잠재력마저 위협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개편, 내부 지배구조 구축, 경영공시제도 도입 등 국민감시 기능 강화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광주시 역시 지역 공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사공단 사

법조칼럼

양영희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연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2차례 성폭력범죄 실행전과로 함께 7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했으며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는 것이 중형에 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 다음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그 사건의 피고인도 2차례 성폭력범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없다. 고도소문을 나서자마자 더 무서운 성폭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자가 모두 어느 정도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본다면, 그 해결방법은 치료일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흉악한 성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캐나다는 성범죄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도 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범률이 13.2%,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이 57.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치료감호법의 개정으로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활용실적은 저조하다. 굳이 치료감호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검찰 및 법원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정신적 장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스스로 교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의 형제·자매를 지키는 길이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성범죄자 적극적 치료 프로그램 도입해야

성범죄자 적극적 치료 프로그램 도입해야

실형전과로 함께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가 그동안 재판하였던 연쇄 성폭력범죄의 피고인들도 대부분 성폭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범죄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나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흉포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형을 더 높여서 범죄자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 소아성기호증,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나 왜곡된 성인식 등 범죄자 개인의 정신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면이 크다. 처벌수위를 아무리 올린다 한들 그 범죄자는 출소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형법의 기본적 기능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에 틀림없다.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정도만큼의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음주 희식문화 변화 필요...공연·영화 등 문화희식 전환을

술 문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폭음과 강권 그리고 폭탄주다.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음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려면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앞장서 음주에 관한 새내규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며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적당량의 음주를 권하고 주량에 따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전한 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한, 술 중심의 희식을 영화·연극·공연 관람 등으로 대신하는 희식문화도 필요하다. 한 직장 팀에서 몇 주씩 희식비를 모아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었다. 팀원 모두 만족했고 다음 날 회사에서 공연 이야기를 나누며 팀원 간에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는 '부러라, 마셔라' 희식보다 문화 희식이 많아질 것이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장동동〉

사건 보도·판결문 선정적 표현 자제했으면

요즘 자살을 줄이기 위해 자살사건의 보도나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각종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 마냥까지 측면에서 아작도 줄고 싶으면 실은 표현들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성폭행 관련 재판 때 검찰의 기소장이나 판사의 판결문 등에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구는 가해자의 계획성과 의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님

에도 지나치게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범죄를 실수 정도로 사소하게 만들 소지가 있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을 반영해 재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신문과 방송에서도 '욕정...' 등의 표현을 굳이 안 쓴다 하여 내용의 본질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이 표현은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無等鼓

만약 직장에서 당신보다 20년이나 젊을 신입 사원이 당신의 직함 대신 이름에 '님'을 붙여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님'이란 호칭이 높임말이긴 하지만 아마도 씩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급을 간단으로 한 위계질서에 길들여진 탓이다.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사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내 호칭과 수직적인 직급체계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유지시켜온 토대였다. 호칭만 들어도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고, 누가 따라야 하는 사람인가를 금방 구별할 수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수직적 문화가 조직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호칭이나 직급체계를 뜯어고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CJ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직급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서로 '000님'으로 불렀다. '호칭의 민주화'에 힘입어 10년간 조직문화가 달라보게 유언해졌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보탬이 됐다. SK 텔레콤은 부장 이하 직원을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했다. 그런가 하면 제일기획은 최근 수직적 직급 체계를 'C1-C2-C3'로 단순화하고 임직원의 호칭을 '프로'로 통일시켰다. 대한항공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 사고가 잇따르자 델타항공의 컨설팅을 받아 '언어의 빛'에 갇혀 있던 계급적 문화를 타파했다. 그 해법은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반면 호칭파괴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존 제도를 부활시킨 기업들도 있다. 나아가 많은 선배들과 대화가나 대외업무를 볼 때 때때 불편함이 컸다는 게 이유다. 호칭만 바꾼다고 조직의 창의성이나 경쟁력이 절로 향상되기는 힘들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기업문화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호칭 파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기 구독 2200-641
사회 1부 2200-612